

시론



남성욱

- 현)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교수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새해는 경제안보전쟁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새해 들어 동유럽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NATO)의 東進에 대항하는 명분하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다. 국경에 10만명의 병력을 배치하는 동시에 대유럽 가스전을 잠가버렸다. 한겨울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34% 폭등하였다.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이 ‘야말~유럽 가스관’ 수송물량 경매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폴란드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가스 흐름이 중단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에너지 가격 상승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유럽은 최근 짧은 계약을 해왔다.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싶다면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서방을 압박했다. 푸틴의 복심은 우크라이나 긴장을 빌미로 러시아에서 독일로 연결되는 신설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 2’의 신속한 가동이다.

본격화된 미·중 갈등의 근원도 반도체와 배터리 장악을 위한 경제패권의 주도권 싸움이다. 한때 호주의 최대의 수출국이었던 중국은 미국이 주도한 중국 기업 화웨이 제재에 호주가 동참하자 급변하였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과 바닷가재, 와인 등 수입을 막는 보복조치를

취하면서 양국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이다. 카자흐스탄은 LPG 가스 가격 상승으로 폭동 사태가 발생하였다.

19세기 이전의 전쟁은 영토와 종교 갈등이었다. 20세기는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둘러싼 전쟁이었다. 21세기는 어떤 전쟁의 시대인가? 각국이 다양한 카드를 들고 상대를 압박하는 복합전쟁(complex war)의 시대다. 슈퍼 파워들은 한손에는 원자재와 제품을, 다른 한손에는 무기를 들고 세계 도처를 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국제질서의 기준은 노골적인 경제적 이득이다. 절대 강자가 사라지면서 물고 물리는 정글의 국제정치가 본격화되었다. 과거 경제적 슈퍼 파워에 의한 질서를 설명하는 국제정치경제 이론 중의 하나는 패권안정론이었다. ‘킨들버거의 함정’을 제시한 미국의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거(C. Kindleburger)는 「대공황의 세계 1929~1939」에서 대공황의 원인은 세계 리더십 공백에 있었다는 주장이었다. 하버드대 그레이엄 엘리슨은 2017년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 trap) 이론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2022년은 무기보다는 경제가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다. 모든 자원이 무기화되면서 안보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다. 강력하게 폭주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첨단산업의 비타민’이라는 희토류를 장악하며 각국의 숨통을 죄고 있다. 1970년대부터 희토류 원재료를 수출한 중국은 1990년 들어 미국을 넘어섰다. 중국의 개혁 개방 전도사인 덩샤오핑은 지난

1992년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고 강조하며 네이멍구 바오터우에 희토류 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중국은 2000년대 희토류 생산과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거두었지만 2010년대 들어 전략을 수정했다. 국내 자원은 비축하고 해외 희토류 확보에 주력했다. 자원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인지하고 히든카드를 남겨두기 위해서다. 중국의 자원 확보 노력은 막대한 외화보유고를 기반으로 전 세계로 손을 뻗치고 있다. 중국은 안으로 조이고 밖에서 퍼오는 ‘쌍끌이’ 전략으로 희유금속을 손에 쥐고 있다. 희유금속이란 존재량이 적거나 생산·추출이 특정국가에 편중된 금속원소다. 한국은 희토류 17종에 리튬·코발트·니켈 등을 포함해 35종을 희유금속으로 분류한다. 시진핑 주석은 2019년 5월 ‘희토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선언하면서 2020년 ‘수출통제법’을 만들어 희토류를 전략자원으로 분류했고, 2021년 ‘희토류 관리 조례’를 통해 희토류 산업 전반의 공급망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했다. 또한 ‘하얀 석유’로 불리는 리튬의 경우 채굴에서 중국의 비중은 2017년 전 세계 5%에 불과했다. 반면 제련 89%, 전기화학 75%, 부품 50% 등 생산 공정 전반에 걸쳐 중국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마침내 중국은 전 세계 광산에서 채굴 단계부터 주도권을 장악했다. 2018년 이후 중국이 인수한 해외 리튬 광산 거래규모는 43억 2,550만 달러(5조1,300억 원)로 미국(13억 8,850만 달러)의 3배가 넘는다. 고효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코발트는 아프리카 콩고가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80%는 중국으로 보내 중간 가공을 거친다.

중국이 변심하면 한국은 언제든 원·부자재 조달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리튬, 코발트, 니켈 가격은 지난해 2~5배 올랐다. 중국이 가공단계의 이윤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 시장이 좌우되는 구조다.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소재 흑연의 경우 한국의 대중 의존도는 99%에 달해 절대적이다. 지난해 품귀 현상으로 전국 트럭을 멈추게 했던 요소수(97%) 역시 중국의 공급에 달려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주재하면서 ‘원료와 농산물 공급은 중국 같은 대국에게 중대한 전략적 문제’라며 “콩, 철광석, 원유, 천연가스, 구리, 알루미늄 하나하나가 국가의 운명과 연결돼 있다”고 경각심을 불어넣었다. 전략물자를 비축하고 주요 자원의 자급역량을 갖춰야 유사시 마지노선을 지켜내 중국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중국은 자원 확보와 판매에 대한 글로벌 네트워크 장악을 위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하는 등 공세적이다. 구태여 핵무기와 미사일을 꺼내들지 않아도 상대국의 숨통을 조일 카드가 산업현장에서 구비되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는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이 2017년 취임한 뒤 미국이 내세웠던 대외전략 기조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前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대부분 뒤집었지만 ‘미국 경제 우선주의’는 지속 및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신전략 마

련에 고심하고 있다. 동맹·우방을 끌어들이며 핵심전략물자 조달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핵심 품목 공급망을 점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2월 ‘회복력 있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주요 품목 및 산업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내렸다. 100일 만에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4대 품목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왔다. △국방 △공공보전 △정보통신기술(ICT) △에너지 △운송 △농업 및 식품 생산 등 나머지 6대 핵심 산업 공급망 리스크 점검 결과와 대응 방안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정책도 확대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안보 전쟁 제1전략으로 앞세운 구호다. 바이 아메리칸은 연방정부가 공공 물자를 조달할 때 미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중국의 경제안보 도발에 대비하며 미국경제기초체력(fundamental)을 다지고 있다. 주미 한국대사관이 발간한 ‘미국의 주요 대외정책 수단 바로 알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규제 수단에는 수출통제, 對중국 軍産복합체 증권 투자 금지, 강제노동 제품 수입 제한, 무역법 제301조, 경제제재 등이 있다. 경쟁력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 강화입법(Endless Frontier Act)’을 추진하는 등 미래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바이 아메리칸법은 1933년 제정된 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규정이 강화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7월 기준을 더 끌어올렸다. 완성품 내 미국산 부품이 55%면 가격 특혜가 주어지던 것을 60%로 상향했고

2029년에는 75%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국’을 신설하는 등 향후에도 이 기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제안보 복합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2019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였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핵심소재 3개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였다.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은 2016년 7월 사드 갈등으로 구체화되었다. 限韓令은 경제전반에 걸쳐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한국경제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였다. 군대만 보내지 않았지 피해는 전쟁이상의 것이었다. 요소수가 부족하여 트럭이 멈출 지경이었다.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내 공급 부족을 이유로 1월 들어 한 달간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의 석탄 수입량 중 인도네시아산 비중은 20%에 달한다. 글로벌 수급 불균형으로 제2의 요소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지난해 11월 취임 후 신속하게 경제안보 추진회의를 개최하였다. 목표는 △공급망을 강인하게 만들어 일본 경제의 자율성을 향상하는 것 △인공지능·양자 등 중요 기술의 육성에 노력해 일본 기술의 우위성과 불가결성을 확보하는 것 △기본적 가치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

강화해가는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선 반도체, 대용량 전지, 광물자원(희토류) 등 이른바 ‘중요 물자’나 그 원재료들의 일본 내 제조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일본에 생산 시설을 지으면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을 법안에 명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산업의 쌀’로 비유되는 반도체다. 일본 반도체는 1980년대 후반 세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쟁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대만 등에 밀려 경쟁력을 잃었다. 전체 수요의 60% 이상을 대만·중국 등에서 수입한다. 자연재해나 외교적 갈등으로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다음은 첨단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5000억엔(5조2000억원) 규모의 경제안보 관련 기금을 별도로 조성한다. 중국 등을 염두에 두고 기밀유출 부분도 정비된다. 마지막으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선 핵심 안보동맹인 미국 등과 협력 강화다.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일본이 미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 여부다. 일본 내에서도 경제의 ‘탈중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를 보면, 일본의 대중 수출 비중은 2000년 6.3%에서 2019년 19.1%까지 치솟았다. 수입도 같은 기간 14.5%에서 23.5%까지 늘었다. 확고한 미·일 경제안보 동맹을 기반 위에서 가성비 높은 기술력과 제품으로 중국 시장 공략을 지속한다는 속내다.

일본은 새해 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안보추진법(가칭) 제정안이 가결되는 대로 재무성, 경제산업성, 방위성 등에서 대규모 인원을 받아 내각부 산하로 경제안보담당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의 역점 정책인 경제안보추진법은 경제안보를 외교안보와 분리된 독자 영역으로 규정하고 중요 전략물자 확보 및 첨단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핵심이다. 일본과 대만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여당관 2+2' 회의를 개최했다. 미국은 정보기관, 군, 각 부처에서 '레드팀'을 도입하였고 CIA는 조직 역량을 기존의 대테러에서 경제정보수집 분야로 이전하고 있다. 사실 경제안보는 자유무역이나 자본의 자유 이동으로 최적화된 공급망을 인위적으로 수정하겠다는 자유역 질서와 모순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계는 각자 도생의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 다른 나라에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처나 제재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연말에 미국과 체결했던 통화스와프를 종료하였다. 한은은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과 수출 둔화가 예상된다. 주식시장에 투자된 해외자본이 8천억 달러 가까이 되는 상황에 45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충분한지는 미지수다. 비오는 날에 대비하는 안전장치마저 포기하였다. 일본은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연장하지 않았다. 경제안보 전쟁의 시대에 동맹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일본 기시다 내각의 경제안보정책을 사실상 설계한 아마리 아키라 전 간사장은 "가치관이 다른 나라에서 기간 인프라 설비를 수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미가 적지 않은 주장이다. 후보자들의 '사과'와 '유감'이 화두가 대선 정국에서 우리의 '전략적 경제안보' 대책은 무엇일까?